

녹색전환과 기본소득

2019.11.22

이상헌

(사)녹색전환연구소장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sanghunlee65@gmail.com

1. 녹색전환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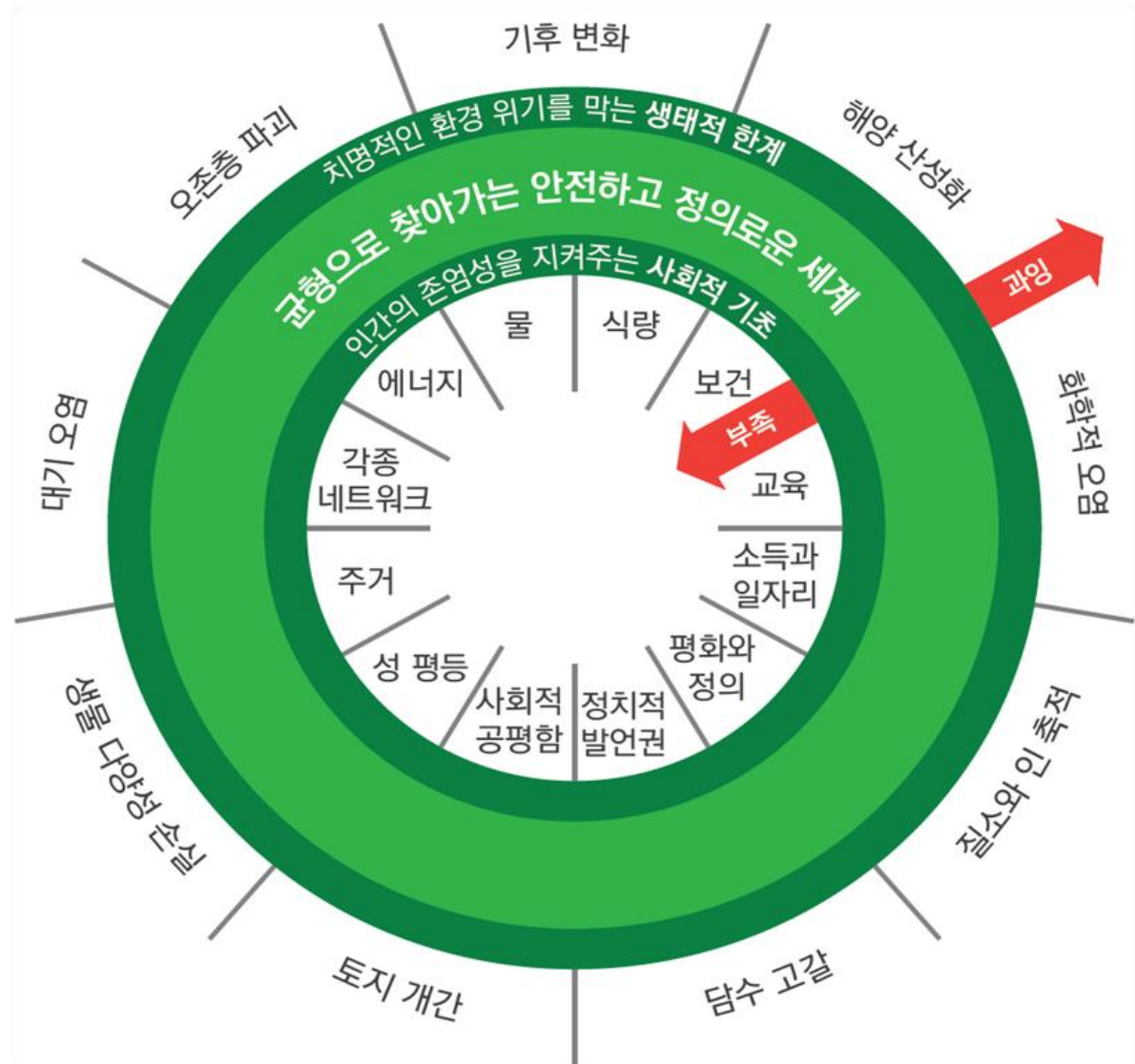
-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이란 ‘생태주의’(ecologism)의 입장에서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방향을 선회하는 것.
- ‘기후변화’는 발전의 도그마를 전면적으로, 시급하게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이며, 녹색전환이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
- Tim Jackson의 **제로 성장**: 경제활동에서 물질적 처리량을 줄이기 위해 경제 성장과 에너지 사용을 별개로 생각하는 분리의 원칙 채택(decoupling). 단기적인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생태적 목표를 추구 → 공적이면서 모든 이가 공유할 수 있는 목표와 자산과 인프라에 투자. 상품생산 대신 서비스 기반 활동, 생태/녹색 투자, 노동시간 정책(짧은 노동시간, 더 많은 여가). 부의 분배 방식을 바꾸는 **잘 조정된 자본주의**
- 재지역화(relocalization)를 강조하는 **전환도시(transition town) 운동**.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자족적 농업 생태계 원칙 고수.

1. 녹색전환의 의미

- ▶ 산업화된 나라에서 공동재(the commons)을 다시 부활시키고 확장하려는 움직임 재개.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엘리너 오스트롬). **부엔 비비르(Buen Vivir, 좋은 삶 = 시장이 사회 속으로 다시 들어옴)**. 근대의 인간 중심성을 벗어나 **생명을 중심에 두는 파격적인 생명 중심적 변화**
- ▶ **사회-생태적 전환(socio-ecological transformation)** 개념으로 발전 개념 대체 → 생존에 핵심적인 기본욕구(basic needs)가 충족된 구체적인 인간활동의 수준에서 모든 사회는 사회-생태적 전환이라는 사건을 통해 자연적인 공동세계,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주어진 문화와의 특별한 관계들이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됨. → **인간 삶이 가능하고 사회적 삶의 과정이 세대를 이어 전파되려면 항구적인 조절의 과제인 ‘자연과의 사회적 관계’를 다루어야 함**

1. 녹색전환의 의미

- 도넛경제학(Kate Raworth) :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간 복리를 추구하는 성장. 경제정의와 환경정의를 동시에 추구함
- 그린뉴딜에 가까운 개념(성장에 대해서는 불가지론)



2. 탈성장과 녹색뉴딜의 비교

1) 탈성장과 녹색뉴딜의 공통점

- **크게 생각하기.** 탈성장과 그린뉴딜은 큰 비전을 제시함.
- **다양한 솔루션.** 모든 것에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플랫폼을 주장.
- **운동적 투쟁에 근거.** 탈성장 운동은 전세계의 환경 정의, 기후 정의 및 세계화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린뉴딜의 캐나다 지지자들은 노동, 원주민 및 기후 정의 운동과 관련이 있음.
- **새로운 경제학.** 채무 없는(debt-free) 협동적 경제를 옹호하며, 포스트 케인즈주의 경제 원칙에서 비롯됨.
- **돌봄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건강 관리, 교육, 예술, 보육 및 건축 공동체와 같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돌봄 경제’ 지지.
- **포스트 카본 및 포스트 자본주의.** 화석 연료 회사에 대한 보조금 및 혜택 삭감 제안. 두 프로젝트 모두 미래에 대한 탈탄소 비전을 가지고 있음. 또한 그린 뉴딜과 탈성장에도 자본주의 옹호자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두 제안이 근본적으로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봄. 모든 것이 공유된 사회를 옹호.
- **국제주의.** 탈성장주의자는 “빈국이 자신의 발전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구가 반드시 탈성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핵심 원칙에 국제 연대를 포함시킴. 그린뉴딜은 서방 국가에 중점을 두었으나 국제 연대 경제를 구축하여 부국과 빈국의 불균형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함.

<참고자료> Degrowth vs. the Green New Deal by [Aaron Vansintjan](https://briarpatchmagazine.com/articles/view/degrowth-vs.-the-green-new-deal?fbclid=IwAR2I656I22Vo4mEn2GzK_YqEDtkInRcxbPfty8K81D6mTRw8W-2vxopRN0) Apr 29, 2019

https://briarpatchmagazine.com/articles/view/degrowth-vs.-the-green-new-deal?fbclid=IwAR2I656I22Vo4mEn2GzK_YqEDtkInRcxbPfty8K81D6mTRw8W-2vxopRN0

2. 탈성장과 녹색뉴딜의 비교

2) 탈성장과 녹색뉴딜의 차이점

● 이론과 정책

- 탈성장은 대부분 주류 경제에 도전하는 데 중점을 둔 학술 운동. 탈성장 정책 제안이 있었지만 운동 내부에서 이 정책들에 대해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님.
- 반면, 녹색뉴딜은 대부분 정책 플랫폼. 초점은 일련의 비전을 가진 정책을 구성하는 것.

● 성장

- 탈성장론자들은 경제성장의 영향을 줄이고 경제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 이들은 그린뉴딜이 자본주의 이후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에 묶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 그러나 탈성장이 특히 북미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호소력이 없음을 인정함.
- 대부분의 녹색뉴딜론은 경제 성장에 대해 불가지론적이거나 지지함. 일부 녹색뉴딜 지지자들은 경제 성장에서 환경 영향을 분리 할 수 있다고 주장. Alexandria Ocasio-Cortez의 그린뉴딜에서는 성장이라는 용어를 거의 언급하지 않음.

● 소비

- 탈성장은 오랫동안 소비주의 문제를 천착함. 필요없는 쓰레기를 사도록 강요하는 폐기물 대량배출 경제에 초점을 맞춤. 지속 불가능한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된 생활 방식을 해체하면서도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
- 그린뉴딜 옹호자들은 소비 감소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함. “Ocasio-Cortez가 우리에게서 햄버거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했던 공화당의 반발에 직면.

2. 탈성장과 녹색뉴딜의 비교

3) 고유한 정책들

● 탈성장

- 근무 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독려
- 생태적 세제 개혁. 소득 대신에 지출이나 오염 활동에 과세. 자본이득과 상속에 대한 높은 과세.
- 기존 주택의 재생, 사용하지 않는 주택과 투기에 대한 높은 과세 .
- 광고 줄이기. 프랑스 Grenoble 처럼 공공 장소에서의 광고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 기본 및 최대 소득.

● 그린뉴딜

- 일자리 보장과 화석 연료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재교육 지원.
- 모든 새로운 녹색 일자리는 공공 또는 공동체 소유여야 함.
- 최저 임금 인상 및 직장의 보호
- 이민자들에게 민주적 권리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 보편적 육아.
- 도시 대중교통 및 농촌 지역의 전기 트럭 보급. co-operative ride sharing.
- 원주민 주권을 인정. 동등한 서비스와 원주민 지역 소유 에너지 제공.
- 협동 조합 주택의 대규모 건설.
- 설계나 제조 시, 계획된 노후화(planned obsolescence) 금지.
- 협동 조합 및 커뮤니티 은행에 투자하여 사람들의 돈이 유해한 산업에 투자되지 않게 함.
- 캐나다 무기 산업이 탄소 제로 운송 쪽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함.
- 캐나다의 공업에 대한 강력한 인권 및 환경 규정.

2. 탈성장과 녹색뉴딜의 비교

4) 문제점

- 탈성장

- 전체적으로 탈성장 운동에는 단일 정책 플랫폼이 없음. 많은 논의가 학문적이므로 사람들이 개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개념이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음.
- 북미에서는 탈성장 아이디어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음.
- 소비에 대한 비판과 반 성장 입장은 유권자들을 소외시킬 수 있음.
- 대부분의 이윤이 자원 추출 산업(extractive industries)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탈 성장을 위한 전환에 자금을 지원할 것인가?

- 그린 뉴딜

- 북미의 사회 운동은 뉴딜 (New Deal)이 시행된 30 년대에 비해 약하고 분열되어있음. 누가 노조가 그랬던 것처럼 정치인들을 압박할 것인가?
- 지역 수준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으며, 정책이 사람들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낌.
- 분권화된 연방 정부와, 도시, 지방, 국가 등 다양한 스케일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 (축소되는) 임금 경제에서 밀려 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있는가?
- 지속불가능하고 낭비적인 소비를 최소화 해야 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2. 탈성장과 녹색뉴딜의 비교

5) 해결책

- 탈성장
 - 탈성장은 보다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북미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에 참여해야 하며, 비 학술적 청중을 위한 접근 가능한 미디어를 제작 해야함.
 - 아직 북미에서 선거 전략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사회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가치와 아이디어로 사용해야 함.
 - 탈성장 경제가 어떻게 작동 할 것인지를 더 잘 이해하려면 탈성장 정책을 이용한 엄격한 모델링과 실험이 필요함.
- 그린뉴딜
 - 그린뉴딜은 그린뉴딜 옹호자, 사회 운동 및 정당 사이를 연결하는 선거 전략을 개발해야 함.
 - 참여하는 시민의 커뮤니티 스케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대규모 동원과 교육이 필요함.
 - 지역 및 연방 차원의 정책 결정에 참여, 일자리 나누기 실현, 돌봄 사업 부문의 확장, 모든 사람이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기본소득을 제도화 해야 함.**
 - 광고에 세금 부과, 도시의 재활용 활성화, 퇴비화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소비자 교육, 커뮤니티 수리 센터 만들기, 자연에 영향력이 적은 여가 활동에 보조금 제공.

3. 한국 발전 프로젝트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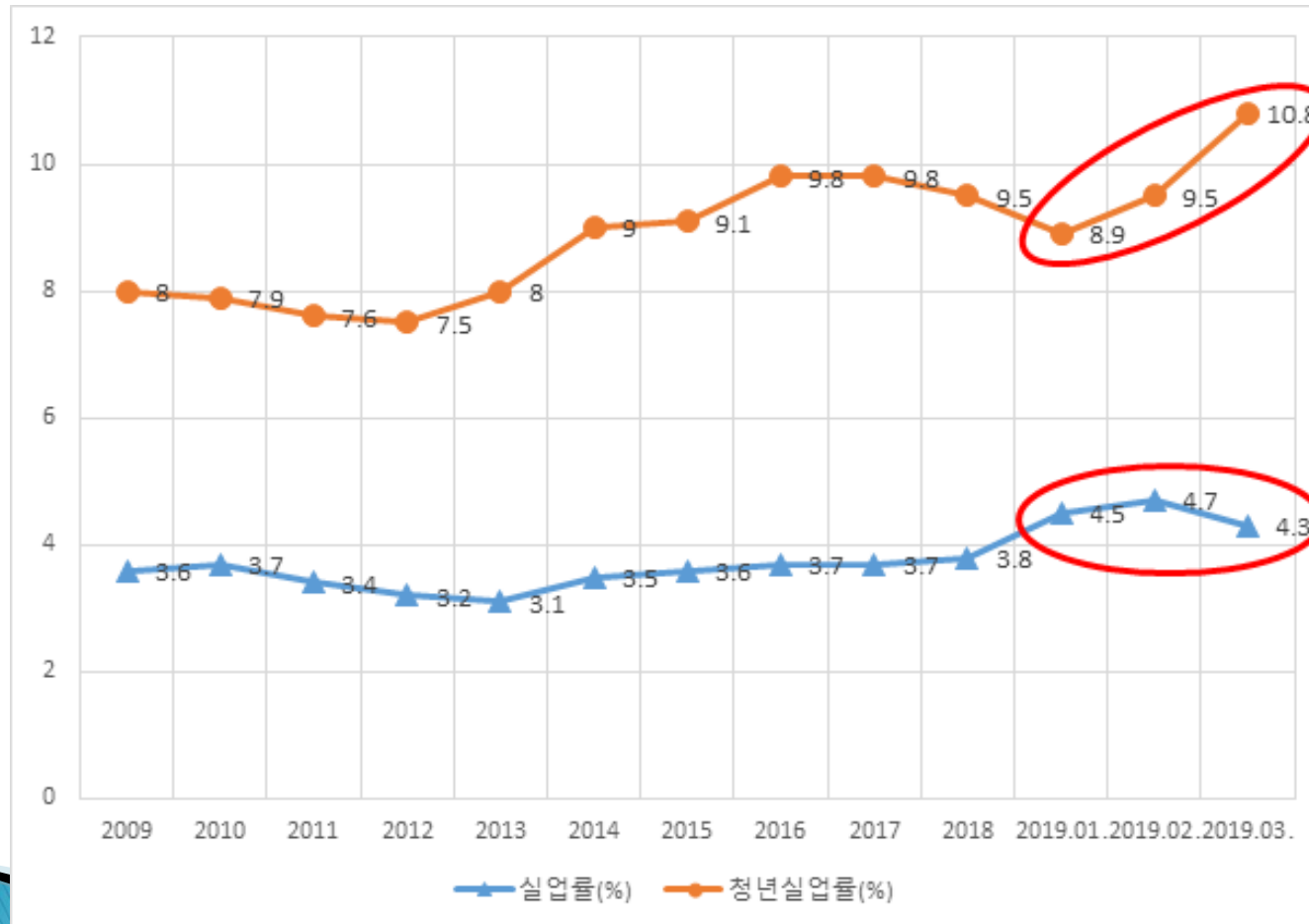
1) 경제

- **공유자원**인 토지 개발이익을 사적으로 소유화. **개발이익의 사유화, 개발비용의 사회화**
 - 우리나라 땅값, 8,447조원(정동영 의원실, 2017).
 - 1964년 민간 토지가격은 1.7조원(한국은행), 54년간 6,702조원 상승. 동기간 국내총생산 0.7조원에서 1,559조원, 노동자 임금 총액 0.5조원에서 747조원으로 상승
 - 상위 1%가 소유한 토지는 가액기준 민간 토지의 46.0%, 상위 5%는 72.9%, 10%는 84%(토지의 과도한 소유편중)
 - 주택은 상위 1%(13.9만명)가 90만채 소유(1인당, 평균 6.5채), 상위 10%(138.6만명) 450만채 소유(1인당 3.2채)
 - 강남 부동산의 가치 원천. 불로소득의 환수는?
-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New normal). 대기업(재벌) 위주의 경제구조 (Black ocean).
-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증대**, 계급 사회를 넘어 신분제(재벌가문의 패악질과 폭력행사), 청년 실업률 증가, 비정규직 확대와 차별.

3. 한국 발전 프로젝트의 결과

1) 경제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한국 발전 프로젝트의 결과

2) 사회

-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 사망률, 낮은 행복지수

- 압도적 1위의 자살 사망률. 특히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자살률이 (10만명당) 80명에 육박하고 75세 이상 자살률은 평균의 4배
- 유엔 산하 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전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18 세계행복보고서' 발표(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부패에 대한 인식, 사회의 너그러움 등 조사)
- 한국은 57위. 1위는 핀란드 (대만 26위, 일본 54위, 중국 86위 등)
- 재벌/대학/언론/종교(대형교회, 대형사찰) 등의 이익공동체와 배타적인 사회적 배제 장치(구분하기). 혐오의 정치(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 이주민/난민/새터민에 대한 차별, 일베, 태극기 집회, 엄마부대 등).
- 가치/의미 지향적 공동체 감소, 가상(virtual) 공동체 증가 – 손쉽게 접속했다 끊을 수 있는 “단속사회”(인류학자 엄기호).

3. 한국 발전 프로젝트의 결과

2) 사회

- **‘피난사회’**(사회학자 김동춘)- 모든 사람이 피난지에서서 만난 관계처럼 서로를 대하고, 질서와 원칙보다 이익 추구와 목숨 보전에 여념이 없음(전쟁터 같은 운전, 장사 잘 되면 임대료 올려서 자영업자 쫓아내는 건물주)
- 저출산(인구절벽), 학령인구 감소, 1차 baby boomer들 대량 은퇴. 불확실성 증대. 새로운 고등교육의 목표 미설정.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계기로 드러난 사회의 분열상(학력을 중심으로 계층화된 사회). 교육은 더 이상 계층 이동의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차별을 공고화함.
- 고장난 ‘대의 민주주의’. 보수(대놓고 기득권) vs 진보(shy 기득권) 사이의 경합의 장으로 변질. 광장 정치가 대의 정치를 압도하면서 진영 논리가 지배적. 청작 Demos의 이익 목소리는 실종됨. 비정규직 노동자, 농어민, (다양한)소수자, 난민 등은 아무도 대의해주지 않음.
- **초고령화 사회**(속도가 가장 빠르고, 빈곤율 높으며, 폭력에 노출)
 -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OECD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
 - 2050년까지 노년부양비가 매년 3.8%포인트 상승 예상. OECD 회원국 중 가장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부담에 직면(요양시설 이용 비용,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치료 비용 등)
 - 가정 내 노인 학대(64만명 학대 경험, 0.6%만 신고 통해 도움 받음, 2016년 노인 학대 신고 1만 2009건)

3. 한국 발전 프로젝트의 결과

3) 환경

- 토건사업 의존적(토건마피아) 지역개발로 생태계 파괴(간척, 대형댐, 도로 확대, 케이블카, 공항 건설 등)
- 미세먼지(디젤 자동차, 화력발전소, 사업장, 외국 요인 등)
- 농촌/도시의 하천오염(농약, 생활하수, 축산폐수, 폐기물 등)
- 지하수오염(유류, 화학물질, 관정 사용후 관리부실로 오염물질 유입 등)



도랑 폐기물 야적장



3. 한국 발전 프로젝트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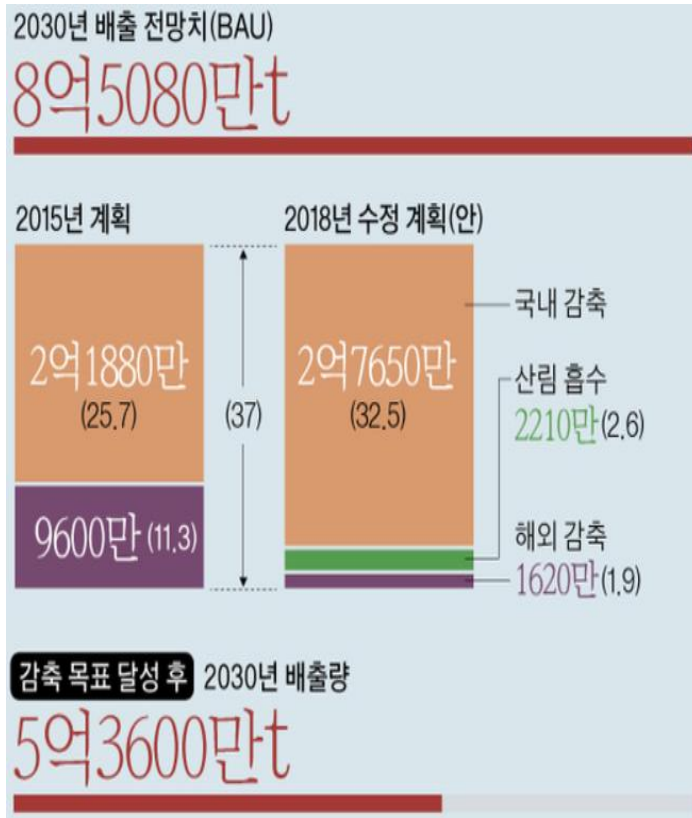
3) 환경

- 농업의 중공업화로 인한 위험성 증대(GMO-심해어 유전자를 사용한 딸기로 냉해 극복, 곤충을 죽이는 성분을 함유한 옥수수 → 식품 안전성 위협. **생물농축**)
- 핵폐기물 관리 및 처분의 문제(**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부재**, 후쿠시마 사고후 방사성물질 확산에 대한 대비책 없음. 방사능오염수 해양 유출 이후 대책 전무)
-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창궐 및 **발암물질 검출**(생태계 복원 난망, 경남북지역 주민의 식수원 위협, 예산 낭비 등).
- 유해화학물질 남용(반도체공정의 유해화학물질 과다사용, 불산, 가습기살균제, 석면 등)
- **폐기물 처분 문제**(플라스틱 폐기물, 폐전자폐기물 처리 문제, 재활용시스템 미비, 매립지 확보 곤란 문제,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매우 저조함**. 온실가스 감축 노력 부족. 에너지 수급 방식의 획기적 전환이 여전히 불투명함.

3. 한국 발전 프로젝트의 결과

3) 환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자료: 중앙일보 기사(2018.7.18.) '2030년 온실 가스 37% 감축... 32.5%는 국내에서 해결'
(<https://news.joins.com/article/22813438>)

Global climate strike (2019.9.21)



최근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까지 계획에 집어넣는 등 빈틈이 많고, 현재의 배출권 거래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등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임.

4. 한국 사회의 녹색전환을 위한 이행 과제

1) 경제

- **그린뉴딜(Green New Deal)의 도입.** 도넛경제학에서 제시한 경제 정의와 환경정의의 동시추구 방법으로 그린 뉴딜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음.
- 2008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그린 뉴딜, 현재 민주당 경선 주자들이 제시하는 그린 뉴딜 참고할 수 있음.
- 핵심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체제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
- 한국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재배분 모델을 반드시 뉴딜에 포함시켜야함 → 한국형 그린 뉴딜 모델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해 **예산, 법제도 정비, 규제와 인센티브 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정치적 결단의 문제!**

4. 한국 사회의 녹색전환을 위한 이행 과제

1) 경제

- **공간(지역/도시)의 생태적 수용능력**에 기초한 개발의 추진
- 사회가 경제의 독자적 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토개발과 환경관리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이러한 패러다임이 적용될 수 있는 단위가 ‘유역단위’의 공간이용계획, 도시계획이 될 것으로 판단됨(**생태계 순응적 공간계획**). 2018년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유역중심의 물관리체제**가 형성됨. 도시계획의 기본단위를 재조정하는 계기로 활용
- **토지의 공유자원으로서의 성격을 확대해야 함.**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천명하고, 개발이득을 사회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세제, 부과금 등으로 개발이익 환수하여 투기적 거래 축소, 토지의 법적밀도 상한제, 상가임대차 관행에 대한 합리적 규제 등)

4. 한국 사회의 녹색전환을 위한 이행 과제

1) 경제

- **기본소득(basic income)** 실시로 사회의 공유자원 활용에서 발생한 이익을(특히 토지/부동산 개발이익)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원칙 적용 (기존 사회복지 정책과의 조정 및 보완 과정 필요).
- 생태적 기본소득 고려. 기후대응관련 활동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생태적 참여소득**’(ecological participation income)도 먼저 고려해볼 수 있음. (예: 걷기,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배출량 저감,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등을 환산하여 바우처 지급하는 방식 등)
- 최소한의 비빌 언덕 제공.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자각의 확대 → 적대를 넘어 ‘환대’와 ‘사회’의 회복.**
- **기본소득의 철학, 자원 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이 먼저 필요함.**
- **농민기본소득 등을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하는 것도 방법임.**
-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 정책: 농가단위가 아니라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2020년 하반기 부터 실시 예정.** 현재 전남 해남군(연 60만원), 전남 강진군(70만원), 전남 함평군(120만원), 전북 고창군(60만원), 경북 봉화군(50만원) 등이 농가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4. 한국 사회의 녹색전환을 위한 이행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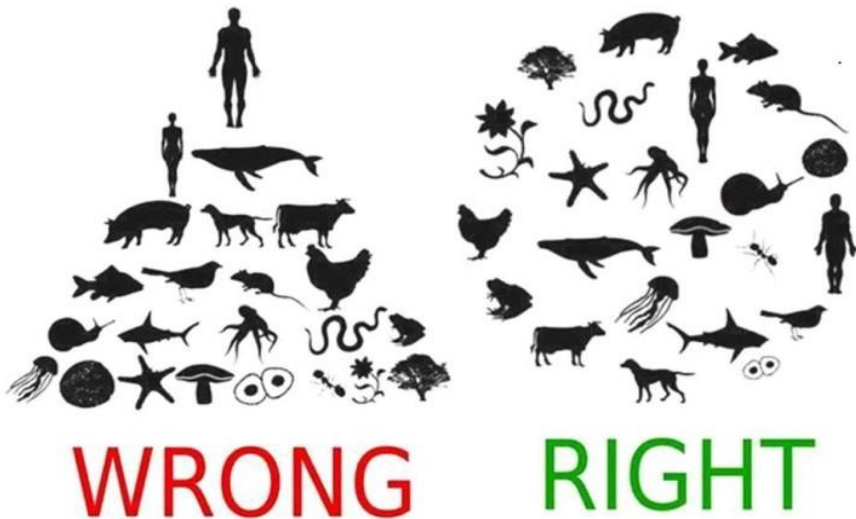
2) 사회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도입으로 “Demos”의 목소리가 정치의 장에 반영되어야 함.
- 양극화된 사회를 포용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이 1930년대 ‘뉴딜’정책을 통해 추구했던 **대압착(great compression)**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예컨대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정책 등의 수단 활용)
- 발전 패러다임에서 요구한 산업인력을 육성하는 교육에서 탈피. 고등교육의 목표 재설정 (AI, Robot화, 소위 4차산업 혁명시대 대량 실업 대비, 자신의 삶을 주체적/협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의 육성)
- 평화체제가 실현되면 ‘피난사회’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사회적 규범 형성하는 과제 추진
- 초고령화 사회 대비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노화/죽음의 수용 방식에 대한 교육, 세대간 갈등 완화 방안, 노인 주거, 노년의 성과 사랑, 노인 돌봄 제도, 비용, 공동체적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

4. 한국 사회의 녹색전환을 위한 이행 과제

3) 환경

- 생태계 내에서 인간의 지위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함. 지배적 지위가 아니라 지구에서 공생하는 존재
- **한반도 생태계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조사 필요
- 주변 국가들과 생태계/환경 보호/생명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 필요(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 미세먼지 관련 공동 조사, 탈핵, 핵폐기물 관리, 후쿠시마 방사성폐기물 대책 등



4. 한국 사회의 녹색전환을 위한 이행 과제

3) 환경

- 발전 패러다임의 도시편향성을 시정해야 함. 농업과 땅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함
- **화석연료 의존적이며 지구화된 식량수급시스템(농업의 중공업화)을, 화석연료 독립적이고 지역소농중심의 유기농업시스템(농업의 생태화)으로 전환해야 함(대원칙).** 참고로, 전 세계의 농지 중 1/3이 동물들에게 먹일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 이러한 원칙을 지원하고, 소농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함(예컨대, 농민기본소득제 등)
- 화석연료에서 떠날 준비 해야 함(전환마을, 전환도시 실험)
- 폐기물 생산 최소화.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적용과정에 사회적 개입(사회적 논의) 확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